

국내외 경제
현안과 과제

2010. 11. 18.

| 세계 경제 균형자로서 역할 제고 방안
- 서울 합의 이후 5대 과제

1. 서울 G20 정상회의의 주요 합의 내용

-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 및 균형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서울 액션 플랜(Seoul Action Plan)’과 저소득 국가 및 소외계층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는 ‘서울 개발 컨센서스’가 합의됨
- 제5차 G20 정상회의가 세계경제의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환율 갈등 해소 등을 목적으로 지난 11월 11~12일 서울에서 열렸음
- ‘서울 액션 플랜(Seoul Action Plan)’은 G20 국가간 정책 공조와 경상수지 가이드라인¹⁾ 제시를 통해 글로벌 재균형을 위한 기반을 마련
 -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의 이행과 환율 유연성 제고 등의 환율 정책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경상수지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수단을 추구, IMF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이 논의되고 합의 도출
- 아울러 저소득 국가의 성장 잠재력 확충 논의를 제안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는 글로벌 최상위 포럼으로서 G20의 위상을 제고시킴
 - 서울 개발 컨센서스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해 ‘다년간 행동계획’의 6대 핵심 원칙과 개도국에 인프라 개발 등 9개 지원 분야 등에 합의

<서울 G20 정상회의 의제별 주요 합의내용>

주요 의제	합의 내용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재정, 통화·환율, 금융, 구조개혁, 무역의 5대 분야에 걸친 G20내 국가별 정책공조 담은 ‘서울 액션 플랜’을 마련 -예시적 가이드라인 등에 기반을 둔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첫 번째 상호평가를 2011년부터 수행하기로 합의
국제금융기구 개혁	-IMF 쿼터 6%이상과 유럽의 이사회 2석을 신흥국에 이전
글로벌 금융안정망 구축	-IMF의 탄력대출제도(FCL) 강화 및 예방대출제도(PCL) 신설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가능
개발	-다 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 채택 -다년간 행동계획 채택 및 인프라 등 9개 이행 과제 제시
금융소외계층	-저소득 가계 및 중소기업의 금융서비스 접근 가능성 확대
에너지	-화석연료보조금 이행 경과 점검, 에너지 가격 변동성 구체화
무역	-2013년까지 무역·투자장벽 설치 동결을 합의한 토론토 합의를 재확인

자료: 서울 G20 정상회의 합의문 정리.

1)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이란, 지난 2010년 10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 간의 환율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각국의 경상수지 흑자 혹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 이내로 조절토록 합의한 방안.

2. 서울 G20 정상회의의 기대효과

- '서울 액션 플랜'은 G20의 환율 공조체제 형성을 위한 기반이 되어 글로벌 불균형 축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경주합의'를 넘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²⁾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의 기반을 다진 것은 의미가 있음
 -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경상수지 목표제를 확정하지는 못했지만 2011년 프랑스 정상회의로 환율공조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 시한을 지정한 만큼 G20 환율 공조 체제의 기반이 마련됨
- G20 차원의 지속적인 환율공조 노력은 경상수지 흑자국의 환율 절상을 통해 수입 수요와 내수를 확대시키고 경제 구조개혁의 계기가 될 수 있음
 - 역외 수출의존도와 총저축률이 높고 투자는 정체된 경상수지 흑자국들은 글로벌 불균형을 확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음
 - 역외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신흥국들의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60%를 넘어 OECD 평균 20%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아시아 국가의 경상수지 흑자 기조는 꾸준히 유지되며 불균형을 심화시킴
- 글로벌 금융위기와 환율전쟁으로 심화되던 보호주의도 진정될 것임
 - 2013년까지 무역·투자장벽을 동결키로 했던 토론토 정상회의의 합의를 재차 강조함으로써 환율 전쟁으로 심화되던 보호주의 조치들이 정상화될 것임
- 글로벌 지속가능성장뿐만 아니라, 개발 및 신흥국 이슈로 의제가 확대됨으로써 세계문제를 다루는 '최상위 포럼'으로써 G20의 위상이 제고됨
 - 신흥국으로의 IMF 쿼터 비중 확대와 '서울 개발 컨센서스' 합의 및 신흥국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등으로 G20의 의제가 보다 확대되었고 위상이 높아짐

2)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이란, 지난 2010년 10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 간의 환율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각국의 경상수지 흑자 혹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 이내로 조절토록 합의한 방안.

3. 세계 경제 균형자로서 역할 제고 방안

- 서울 합의 이후 5대 과제

-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선진국-신흥국 간 중재자 역할과 이해관계 조정자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축소하고 재균형(Rebalancing)으로 나아감에 있어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5대 과제를 도출함
- 첫째, 국격 향상을 위한 실천 과제
 - G20의 주요 의제를 성공적으로 조율한 만큼,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내용적으로도 이행해 나감으로써 여타 회원국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함
 - 국내적으로도 선진국 수준으로 법 질서 준수, 신뢰, 협력, 공동체 발전의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여 국가 브랜드를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함
- 둘째, 예시적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도출을 위한 실천 과제
 - 경상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내년 프랑스 정상회의에 자문 역할도 강화
 -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GDP대비 경상수지를 $\pm 4\%$ 로 정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으나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었음
 - 그러나, 2011년 프랑스 정상회의 때까지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합의의 시한이 명시된 만큼 IMF 등 국제기구의 후속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 적정 경상수지 목표제의 합의 시에도 개별 국가의 특수성과 신흥국의 성장을 해치지 않도록 기준을 설정하는데 지속적으로 참여
 - 경상수지 목표제는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를 일정범위 내로 축소하는 것이지만 개별 국가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신흥국들의 지속 성장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함
 - 특히, 신흥국들은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높을 지라도 1인당 GDP 수준이 낮고, 외부 요인에 의한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변동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함

- 특히, '서울 액션 플랜'으로 G20을 5개 그룹으로 나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제시된 만큼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지배구조와 평가 방법을 제도화
 - G20국가는 선진흑자국, 신흥흑자국, 선진적자국, 신흥적자국, 원유수출국으로 구분되며 각 그룹과 국가별로 적합한 재정정책, 통화·환율 정책, 구조개혁 정책 및 금융부문정책 등 대안이 제시됨
 - 그러나, 국가별로는 제시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강제할 수 있는 지배구조와 평가 방법 등이 불투명함에 따라, 이행 사항을 서로 점검하는 상호평가 (Peer Review)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함

<G20의 국가의 5개 그룹별 구분과 정책 대안 전망>

구분	국가	대안
선진 흑자국 (Advanced Surplus Economies)	일본, 독일, 한국	-수출의존도 축소 -환율 절상
신흥 흑자국 (Emerging Surplus Economies)	아르헨티나, 중국 인도네시아	-환율 유연성 확대 -사회적 안정망 강화
선진 적자국 (Advanced Deficit Economies)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재정 건전성 확보 -저축률 제고, 투자 확대
신흥 적자국 (Emerging Deficit Economies)	브라질, 멕시코,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노동·생산 시장 개혁 -인프라 투자, 무역정책 개선
원유 수출국 (Oil Exporting Countries)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경제 다변화

자료: 서울 G20 정상회의 첨부문서 행동계획 정리.

○ 셋째, '서울 개발 컨센서스'의 국내 개발 경험의 확산을 위한 실천 과제

- 개발 의제를 제안한 의장국으로서 저소득 국가에게 개발 경험과 교육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글로벌 균형 성장의 기반을 마련
 - 원조 대상국에서 지원국으로 변화된 우리의 경험은 저소득 국가들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확충하는데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할 수 있음
 - 특히, 선진국의 기존 원조 방식을 보완하고 '새마을 운동'과 같은 우리만의 모델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특히, 저소득 국가들의 자립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과제를 선정한 만큼, 원조와 경제 성장 노하우를 함께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언권도 높여나가야 할 것임
- 저소득 국가 지원을 위한 ODA 예산을 확충하고 무상원조 비율도 제고하여 한국에 대한 국제 이미지를 개선

- 2008년 한국의 ODA 규모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0.09%로 OECD 평균 0.3%에 못 미치고 ODA의 무상원조 비율도 50% 수준으로 선진국의 90% 수준보다 훨씬 낮음

○ 넷째,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천 과제

-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에 대한 자본금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자본의 단기 유출입을 감독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 투자은행의 과도한 리스크 부담을 예방하고, 위기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합의에 도달해야 함
 - 아울러, 투기자본의 단기 유출입과 그에 따른 교란행위를 감독하기 위해 동북아 지역의 금융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역내 금융감독기구를 설립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 국내적으로도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내수 시장을 확대하여 역외 변동성이 국내 경제의 급격한 하강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경제 구조 개혁을 꾸준히 이행

○ 다섯째, G0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실천 과제

- G20이 비공식 협의체라는 시스템적 한계를 벗어나 합의 사항에 추진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상설 사무국의 설치로 위상을 강화하고 이행을 뒷받침
 - 다자간 협의체로서 G20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어젠다, 일정 등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도록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향후 회의의 개최와 합의사항 이행에도 도움이 될 것임
- 아울러 G20에서 성장, 개발, 기후 협약 등 글로벌 주요 이슈를 모두 논의함으로써 신흥국이 배제된 G7을 대체하고 '최상위 포럼'으로써 G20가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합의 이행과 새로운 의제 개발에 힘써야 함
 - 실제로 전세계 GDP에서 중국 등 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보여 전세계 불균형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신흥국들과의 정책 공조가 매우 중요해짐

조 호 정 선임연구원 (2072-6217, chjss@hri.co.kr)

별첨. 서울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와 성과

1. 서울 G20 정상회의의 개요

-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경제성장과 글로벌 환율전쟁 해소를 논의하기 위한 서울 G20 정상회의가 지난 11월 11~12일 개최됨
- 제5차 G20 정상회의가 세계경제의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환율갈등 해소 등을 목적으로 서울에서 열렸음
 - G20은 세계 경제를 이끌던 G7과 유럽연합(EU) 의장국, 그리고 12개의 주요 신흥 경제국가들을 더한 20개 국으로 구성
 - 서울 정상회의는 G8 국가 이외의 지역에서 열린 최초의 정상회의로 의미가 있으며, 금융위기 극복 이후 글로벌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논의하는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으로 지속가능 여부를 시험하는 자리이기도 했음
- 특히, 금번 정상회의는 G20 재무장관들의 '경주합의'에서 채택된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 이행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목적
 - 지난 10월 23일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와 환율전쟁 종식을 위해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로의 이행과 경쟁적 통화절하 자제 등이 합의된 바 있음
 - 특히,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경상수지 목표제의 구체적인 수치를 정하고 이에 필요한 국가간 정책 공조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했음
 - 이외에도, 선진국의 IMF 쿼터 6% 이상을 신흥국으로 이전하고 금융규제 개혁을 위한 신규 이슈를 의제화하며, 개도국에 대한 개발의제로 논의가 확대

2. 서울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와 성과

-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는 지난 10월 경주합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환율갈등 해소, IMF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정망 구축, 금융규제개혁, 개발도상국 지원의 구체적 실행 방안의 마련이었음
- 환율갈등 해소, 글로벌 금융안정망 구축, 국제금융기구 개혁 및 개발도상국 지원에 관한 의제가 논의됨

- 환율갈등 및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수치,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G20 국가간 환율공조 방안이 조율
- IMF 차원에서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적 금융안정망 구축 지원 방안을 논의
- IMF 쿼터 비중의 최소 6% 이상이 신흥 개도국으로 이전 추진
- G20 차원에서 저소득 국가의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인적자원 개발, 지식공유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을 모색

< 서울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 >

일정	논의 내용
정상회의 개최	세계경제 상황 점검, 균형성장 위한 정책 논의
세션1	과다한 경상수지 흑·적자 완화방안(환율문제) 논의
세션2	IMF 개혁 방안 채택, 금융위기 국제공조 방안 마련
세션3	개발도상국 지원 행동계획 채택
세션4	새로운 자본, 유동성 기준과 금융회사 규제 방안 채택
세션5	원자재 가격문제 논의, 반부패 행동 계획 채택

○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 및 균형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서울 액션 플랜(Seoul Action Plan)’과 소외계층과 저소득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는 ‘서울 개발 컨센서스’가 합의됨

- ‘서울 액션 플랜(Seoul Action Plan)’은 국가간 구체적 정책 공조와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제시를 통해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기반을 마련
 - 경기판단: 국가별 지역별 균형 성장을 위해 G20 국가간 정책공조와 조율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공감
 - 통화·환율문제: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과 환율 유연성 제고, 및 신흥국은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변동환율제 하에서 환율의 고평가가 심화될 경우,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을 가능케 함
 - 글로벌 불균형: 1)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경상수지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수단을 추구하고,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큰 폭의 불균형이 지속된다고 평가되면 상호평가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불균형의 원인을 평가
2) 예시적 가이드라인은 예방적, 교정적 조치가 요구되는 큰 불균형의 적기 확인(조기경보 시스템)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
3)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첫 번째 평가는 2011년 11월 제6차 G20 파리 정상회의에서 수행하기로 약속

- **IMF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선진국의 IMF 쿼터 6% 이상을 신흥국으로 이전,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탄력대출제도(FCL)* 개선과 예방대출제도(PCL)**를 신설하여 급격한 자본 이동에 따른 국가들의 금융변동성을 완화
 - **금융규제개혁:** 은행자본, 유동성 기준(바젤 III의 도입)과 SIFIs를 보다 잘 규제하고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논의를 지속
 - * 탄력대출제도란, 튼튼한 펀더멘탈을 보유하고 강력한 정책을 수행하는 국가들에게 IMF의 SDR 인출기한 연장과 대출한도를 폐지하는 제도
 - ** 예방대출제도란, 새로운 예방적 수단으로 건전한 펀더멘탈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국가들에게 예방적 유동성 공급의 혜택을 부여
 - **보호주의 저지:** 2013년까지 무역투자장벽을 동결한 토론토 합의를 재확인하고 국제기구 차원에서 보호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저소득 국가의 성장 잠재력 확충 논의를 제안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는 글로벌 최상위 포럼으로서 G20의 위상을 제고시킴**
- **서울 개발 컨센서스:**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해 개도국에 인프라 개발 등 9개 지원 분야와 ‘다년간 행동계획’의 6대 핵심 원칙에 합의
 - **금융소외계층 포용:** 국제기구와 연합하여 저소득층 가계와 중소기업의 금융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FI, 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을 발족에 합의
 -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 2011년 협상 타결을 목표로 논의를 강화하며 협상이 타결된 후에는 조속한 비준을 주문
- **이외에도 신흥국 이슈와 상호평가프로세스 확대 및 반부패,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
- **신흥국 이슈:** 외환리스크 관리 강화,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감독 강화, 무역금융 등 금융규제 개혁에 있어 신흥국과 관련된 규제 개혁에 보다 관심
 - **상호평가프로세스 확대:** 합의에 기초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상호평가프로세스를 확대
 - **에너지:** 화석연료 보조금의 중기적 합리화 및 단계적 철폐, 과도한 화석연료 변동성 완화에 합의

< 각 회별 G20 정상회의 의제와 성과 >

장소 및 일시	의제 및 성과	
미국 워싱턴 2008.11	의제	-국제금융위기 원인과 그간의 조치에 대한 평가하고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정책공조 방안과 국제금융체제 개편방향 마련
	성과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5개 공통 원칙 확인 ①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②금융감독·규제 개선 ③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④국제적 협력 강화 ⑤국제금융기구 개혁 -거시정책공조 원칙 선언 -보호주의 장벽 설치 금지 선언 -금융규제 및 국제금융기구 개혁을 위한 47개 실천 과제 합의
영국 런던 2009.4	의제	-재정확대 등 거시경제정책 공조와 금융규제 및 감독 강화 및 보호주의 저지 방안 마련
	성과	-세계 성장과 고용 회복 ·2010년 말까지 재정 지출 5조 달러, 4% 성장 노력 등 -금융 감시 및 규제 강화 -국제금융기구 강화 -보호주의 저지 및 세계 무역·투자 증진 ·2010년까지 새로운 무역장벽 설치 동결 등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세계경제 회복 ·저소득국가에 500억 달러 제공 등
미국 피츠버그 2009.9	의제	-국제금융기구 개혁과 세계경제 및 성장에 관련된 이슈 및 무역 / 기후변화 재원조성 / 에너지 안보
	성과	-G20 정상회의 연례화 및 국제경제 협력의 주 논의의 장으로 합의 -출구전략은 경제회복이 확고해진 경우, 국제공조 아래 실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합의 -국제금융규제 개혁
캐나다 토론토 2010.6	의제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체제 구축과 국제금융기구 개혁 외
	성과	-지속가능 균형성장을 위한 유사 국가그룹별 정책대안 마련 -은행자본 유동성 규제, 대형 금융기관(SIFI) 규제 등을 서울 정상회의시 마무리하기로 합의 -IMF쿼터 개혁 시한을 서울 정상회의로 단축 -재무장관들에게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와 관련된 국내, 역내, 국제적 수준의 정책대안 마련 지시 -서울 정상회의시 개도국 경제개발을 위한 다년간 행동계획(multi-year action plan)을 마련기로 합의 -각국의 화석연료 보조금 합리화 계획 점검 -보호주의 저지공약(stand-still)을 2013년까지 3년 연장